

文의 친서들고 평양으로… 특사 5인방 화해 물꼬 틀까

남북 정상회담 등 성과에 집중
정의용·서훈, 이번주 美 방문
트럼프에 방북 결과 전할 듯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대표단(대북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5일 평양에 도착했다.

대북 특사단은 1박2일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남북 정상회담, 북미간 대화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현지에서 돌아올 때 어떤 성과들을 가져올 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사단 대표인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도 방북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 특별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평양 순안공항에 무사히 안착, 본격적인 방북 일정에 들어갔다.

특사단은 6일 오후 남쪽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특사의 평양 행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발견한데 대한 담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우리측 특사단엔 장관급이 두 명이나 포함돼 있어 무게감을 더한 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꼬인 북한과

의 실타래를 풀고 특히 남북을 넘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지난 평창올림픽을 맞아 방한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특사가 전달한 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이번 특사단의 일정 속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방북길에 앞서 청와대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긴요한 남과 북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사단 핵심 멤버인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서울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문 대통령에게 방북 인사를 했고 문 대통령은 이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관 '세계기자대회' 오찬에서 "우리는 북한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솔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나가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면서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함께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필요도 있다. 특히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지방선거 모드' 여야, 민생은 뒷전…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국회 계류 법안 8200건 달하는데
여야, 이달 임시국회 안열기로 합의

여야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 선거에 대비해 일제히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하고 있어 민생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가 법안심사 및 처리 등에 늄장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민생, 경제살리기 등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모순됐다는 지적이 많다.

5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8200여건에 다르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200여건에서 많게는 10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현안 법안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룰(rule)'에 국한된 법안 처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안 심사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선거 분위기에 힘들어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는 지적의 목소

리도 나온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는 단순히 특정 인사나 정당을 뽑는 행위가 아니다. 선거를 통해 현정부를 포함한 각 정당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는 등 하나하나의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선거 또한 그러한 국회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정당 관계자는 "선거로 인해 국회가 정지되는 현상은 관례·관습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인 부분이 많다. 정당에 있어서 선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국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국회의 행태를 비춰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많다.

막상 지난 2월 임시국회기간 동안 국회는 사실상의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두 차례 열고, 200여건의 법안만을 처리했다.

설 명절 연휴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는 13일동안 공전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2월 임시국회는 국회의 잇딴 파행으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열렸던 임시국회다. 당

시 여야는 앞다투어 민생을 강조하면서, 타(他) 정당을 겨냥해 '네탓공방'을 벌였던 때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방은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졌고, 상황은 더욱 공방전에만 집중되는 모습을 띠었다.

국회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개헌과 정치개혁 등으로,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제와 다른 이원집정부제와 방안들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떼어오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데, 국회가 지금처럼 신뢰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좀처럼 고려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국회가 제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 국회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인물난' 야권에 연대론 솔솔

5일로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연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야당들은 일제히 "연대는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각 정당들이 지역별 후보를 낸 후 이해득실에 따라 전략적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은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후보 물색과 접촉 작업에 종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

면 위로 부상한 인사가 없다.

때문에 각 정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등판론'까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정당·인물 투표로는 승산이 없고, 후보 단일화로 보수층 결집 효과를 이끌어내 진영 투표로 가능 방법 밖에 없어 연대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에 교차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묵시적 연대'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후보 단일화 작업을 거치

홍준표·안철수 대표 '등판론' 제기
수도권 단체장 '묵시적 연대' 예상

지 않고, 한 지역에 후보자를 동시에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단일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수층의 표가 결집되고, '침묵하는 보수표'까지 얻게 된다면 승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경우 집결된 보수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층의 표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창원 기자

외교·안보문제 논의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하며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한다.

문 대통령의 초청에 5당 대표가 모두 화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오찬 회동에는 1박2일간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고, 대통령의

초청에 여야 5당 대표 모두 참석키로 했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7일에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했지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김정은 특사 방남, 그리고 우리측의 이날 대북 특사 파견 등 한반도 문제에 급변하는 만큼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참석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

文 대통령-여야 5당, 내일 청와대 오찬